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매뉴얼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AI 정밀 진단 표준화 및 시도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료 채취, 조류 부검부터 항원 및 항체 정밀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항목별로 절차와 세부 요령 및 주의사항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질병 진단 및 방역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정밀진단 매뉴얼 발간 및 보급으로 신속·정밀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 및 국민 보건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맞춤형 우수연구성과 도출

검역본부는 2018년도 연구사업(농림축산검역 검사기술개발사업, 예산 약215억원)을 수행한

결과 AI·구제역, One-Health,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AI의 경우,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H5형 백신 후보주 5종을 선정하고, 백신효능평가 결과 효능이 확인된 AI 긴급백신 제조용 항원(5종, 각 1천만수분)을 비축 완료하였다('18.12). 또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살모넬라증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

2년 연속 '정부 혁신' 우수 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해 '정부 혁신' 부문 추진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과 '신뢰받는 정부'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농촌 노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거리 창출에 힘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원,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포용 국가 등 국정 기초를 반영해 올해는 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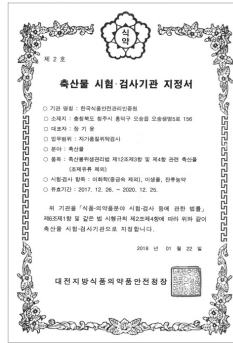
HACCP인증원 서울지원, 가락동으로 사무실 이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업무 등을 관할하는 서울지원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해양환경관리공단빌딩 2층)으로 이전하고 지난 22일 이전 개소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윤 원장, 전종민 기획경영이사 등 HACCP인증원의 임직원을 비롯해, 양진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서울식약청 관계자, 서울지방 HACCP협의회 회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서울지원은 가락시장 역 인근에 위치해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민원상담실, HACCP교육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HACCP인증원은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1월 22일부로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 위탁검사 항목과 절차는 교육개발본부 연구분석팀으로 직접 문의(전화: 043-928-0179)하거나 홈페이지 (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가금 산물 가격 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가금 산물 가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축평원은 가격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자 가금 산물의 유통 단계별 가격 정보를 축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편리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은 가금 산물 가격 조사 참여 업체 및 농가, 생산자 단체 임직원, 유통업체 담당자는 물론이고 정부, 지자체 관계자, 관련 기관 등이며 서비스 대상은 추가 의향 조사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